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00
----------	-------

발의연월일 : 2022. 1. 27.

발 의 자 : 위성곤·김승남·소병철
신영대·양정숙·윤영덕
윤재갑·이개호·이원택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촌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등 어촌소멸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어촌지역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8조의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이하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지역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

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세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 1. ~ 4. (현행과 같음) 5. <u>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u> <u>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u> <u>불제도(이하 “영세어가 직접</u> <u>지불제도”라 한다)</u>
<u><신 설></u>	제18조의2(영세어가 직접지불제 도의 시행 등) ① <u>해양수산부</u> <u>장관은 어촌의 지역소멸 방지</u> <u>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u> <u>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산업·</u> <u>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u> <u>에 따른 어촌(제7조에 따라 해</u> <u>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조건불</u> <u>리지역은 제외한다)에 거주하</u> <u>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u>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u> <u>조에 따라 소득이 낮은 어업인</u> <u>에게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을</u> <u>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u>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세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